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imail.re.kr)

한국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 한국인과 함께 모임 · 활동 참여는 어려워

초록

- 이민자의 사회 참여는 이민자 자신과 가족원의 안정적 삶을 위한 기본적 요소일 뿐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핵심 의제인 이민자 사회통합과 집단 간 관계, 나아가 사회적 포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 다양한 성격의 이민자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은 완벽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본격적인 사회 참여가 기대되는 집단이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참여 기회도 찾기 어려우며 현실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적 배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이러한 위험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들이라도 실제 참여하는 모임은 모국인 모임 정도임. 이주여성, 특히 한국생활을 오래 한 이들은 모국인 모임 보다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동반된 모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한국인과 함께 하는 활동 참여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며 어렵게 참여하더라도 활동 과정 중에 차별과 구분에 직면해 좌절할 우려도 큰 상황임.



1. 배경 및 문제점

- ▶ 이민자의 사회 참여는 이민자 자신과 가족원의 안정적 삶을 위한 기본적 요소일 뿐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핵심역체인 이민자 사회통합과 집단 간 관계, 나아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족, 경제적 지위, 이주배경 등으로 인해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 여건을 증진하기 위한 과정’(UN 2016)인 사회적 포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 ▶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사회 참여가 축소되고 참여 영역도 이민자 집단 내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민자 집단 외부, 특히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등 이민자의 사회 참여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착형 이민자 집단으로 본격적인 사회 참여가 기대되는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과 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해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현황, 구체적인 경험,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였음. 또한 사회 참여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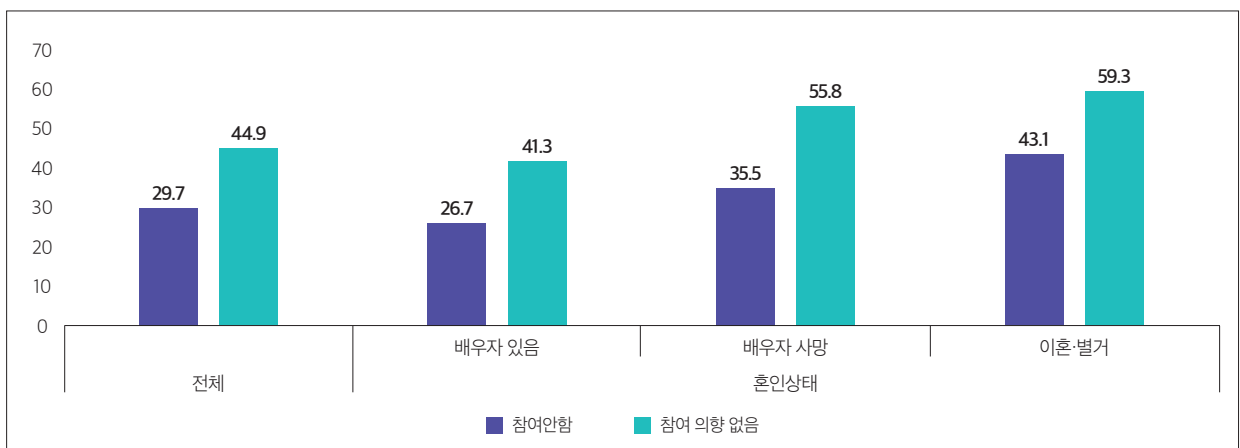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결과

①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한 이주여성 집단

-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중 29.7%는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참여 의향이 없는 이들은 44.9%에 달해 사회 참여가 제한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모임,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참여도 하지 않고 그럴 의향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결혼이주여성 혼인상태별 모임·활동 ‘참여 안함’ ‘참여 의향 없음’ 비율

(단위 : %)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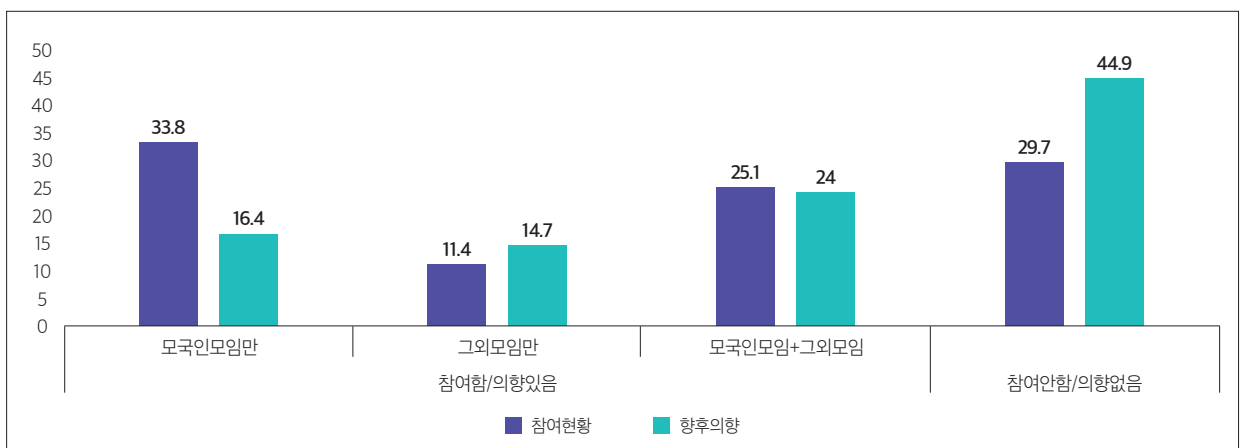
- ▶ 저소득층, 고연령층, 이혼·사별 상태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특히 이혼·사별한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특히 큼. 이러한 점에서 이혼·사별 상태 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모임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는 주목할 만함.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한부모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으로, 이들의 현실과 요구에 부합하는 자조모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

② 사회 참여의 출발점: 모국인 · 이주여성 중심의 집단 내 참여

- ▶ 이민자의 사회 참여 영역은 크게 이민자 집단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가운데에는 모국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58.9%(모국인 모임만 참여+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 참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인 모임은 핵심적인 사회 참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음.

<그림 2> 결혼이주여성의 모임 · 활동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

(단위 : %)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 또한 모국인과의 관계가 한국인과의 관계보다 사회적 배제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는 모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 내 참여가 사회 참여의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은 여성들은 모국인 모임에 대한 요구가 높음.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들의 경우 사회 참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주로 한국어 문제가 사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이주여성 가운데 보다 많은 이들이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모국인 모임을 통해 가족 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모국인 모임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이주여성들이 함께 하는 모임,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비교적 많은 편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도 모임 참여의 출발점으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민자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이주여성 또는 이민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여성 중심 활동에 하나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음.

- ▶ 이주여성 모임을 통해 이들은 가족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자로서의 고단함을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받음. 하지만 초기 적응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가족관계도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모국어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안을 주고받을 필요도 예전만큼 크지 않게 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이들도 생기고 취업을 한 경우도 늘어나면서 모임 빈도 자체가 줄어들기도 함.

- ▶ 다른 한편, 정부나 관련 기관과 관련된 모국인 모임에서는 자율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활동하면서 주체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또 한 번 ‘동원 대상’ 위치에 놓이기도 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여성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음. 이러한 단체는 자신들의 특수성을 기초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자녀가 직면한 차별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③ 사회 참여 영역 확대 요구와 현실: 집단 내부에서 외부로

- ▶ 이민자의 사회 참여에 있어서는 이민자 집단 내 참여와 더불어 집단 외부, 특히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함. 이민자에게 주류집단과의 관계는 정착의 핵심적인 척도이자 이민자 집단 내부에서는 동원할 수 없는 사회적 자원 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가족 내에서는 종족적 배경을 공유하는 가족 단위 이민자와 달리 주류집단 성원의 부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주류집단과의 관계를 동반한 참여가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님. 나아가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참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사회적 포용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 위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는 모국인 모임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 모두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가장 많음. 참여 유형별로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을 비교해보면, 현재에는 모국인 모임만 참여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많지만 앞으로 모국인 모임에만 참여하겠다는 이들은 16.4%에 불과함. 이에 비해, 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 모두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에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외 모임 참여의 경우는 참여 의향이 현황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 사이에서 향후 참여 의향이 없는 이들이 45% 정도에 달하는 데에는 모국인 모임만 참여하겠다는 이들이 유독 적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에는 모국인 모임만 참여하는 이들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그러한 이주여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국인 모임과 그 외 모임에 함께 참여하거나 모국인 모임은 참여하지 않고 그 외 모임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참여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이와 관련해 한국생활 초기 단계에서 사회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진다고 이주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흔히 이주자들이 한국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국어 등 사회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이 완화되면서 각종 모임,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석 결과 이주여성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남. 한국생활이 길어질수록 모국인 모임과 같은 이민자 집단 내 참여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대안으로 고려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보임.

<그림 3> 결혼이주여성 국내거주기간별 모임·활동 참여 현황과 향후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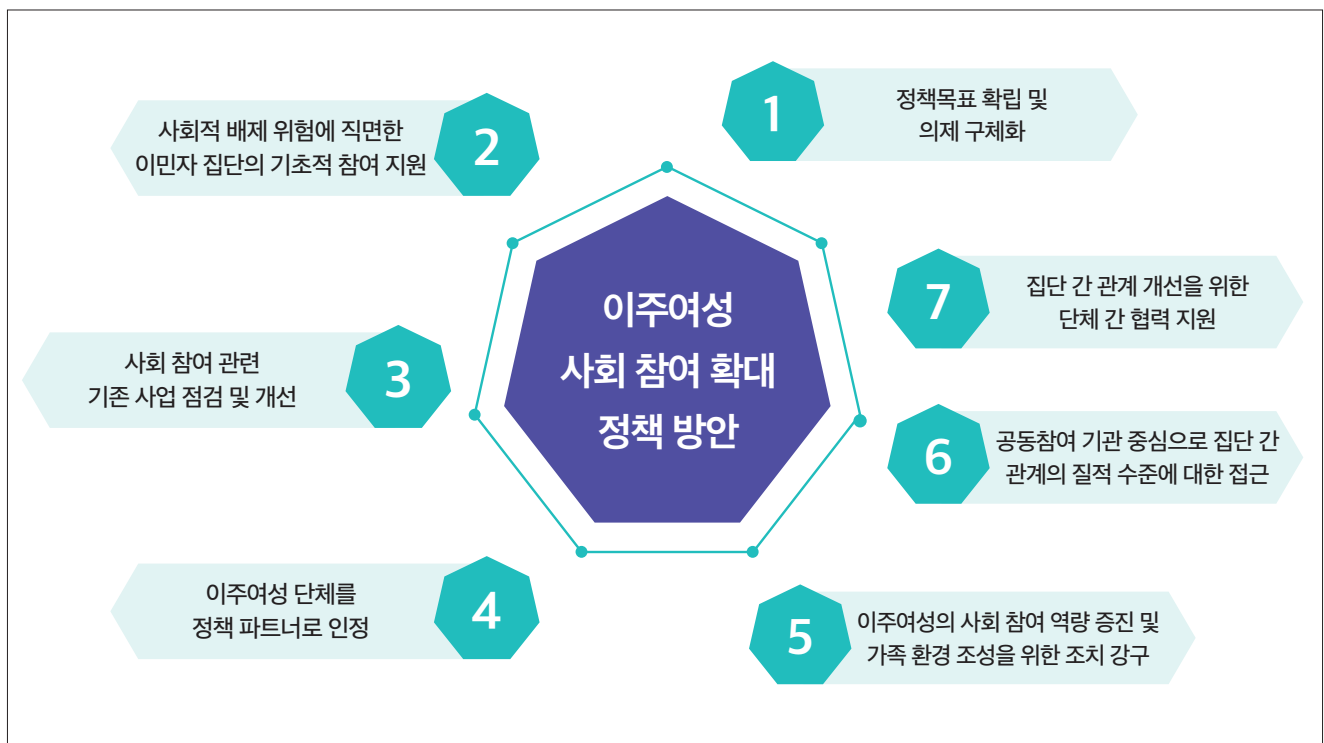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인들과의 관계 형성은 원활하지 않으며 공적인 수준에서도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모임, 활동 기회는 찾아보기 어려움.
- ▶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전환되고 이주여성과 한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한국인과의 관계를 동반한 모임, 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함. 하지만, 통합센터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집단 간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집단 간 공동활동이 활성화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한국인과 이주민 간 구분과 위계가 재생산될 우려가 큰 상황임. 심지어 통합센터나 지역사회 활동 과정 중에 이주민과 한국인이 만나게 되면서 차별이 일어나고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 다른 한편, 이주여성 단체 활동가 사이에서 ‘다문화’ 이외의 의제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회 참여 영역 확대와 관련해 주목할 하지만, ‘다문화’ 외부 참여 역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님. ‘다문화’ 외부 참여를 시도한 이들은 그 공간에서 오히려 이주여성인 자신의 역량 부족을 절감하고 ‘영원한 다문화’로 위치 지워지면서 넘을 수 없는 ‘집단 간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음.
- ▶ 이주여성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나 집단 간 관계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문화’ 외부로 향한 일부 이주여성들의 시도는 막연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음.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외부 공간에 더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으려면 이주여성 자신과 ‘다문화’ 외부 공간 모두의 변화가 필요함.

-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는 자신의 관심과 적극성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사회 참여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사회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차원을 넘어, 가사, 돌봄 부담과도 관련된 사안으로, 이 점에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가족들이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특히, 활동으로 인해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혹시라도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족들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며 집안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조정하기도 함. 사회 참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집 밖 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부정적 태도, 가내 역할 부담 등이 더욱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이와 함께 사회 참여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통합센터나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집단 간 갈등과 구분이 심화된 사례에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과 이들의 참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단지 이주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만을 취하다 보면 모임, 활동 참여를 통해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주자들의 사회 참여와 집단 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정책제언

<그림 4> 정책제언 종합



①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확립 및 의제 구체화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을 통해 정책에서 이주여성 사회 참여 의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에 관한 접근 방향을 명확히 제시

-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조항 신설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한 기존의 조치 이외에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조치,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가족의 지지 강화, 사회적 환경 조성 방안 등 포함

- ▶ ‘2022년까지 포괄하는 현행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상당 부분 수정, 보완
- ▶ ‘2023년부터 추진될 신규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개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

②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한 이민자의 기초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저소득층, 고령자, 이혼·사별 상태 이주여성 등 중층적인 배제 위험에 놓여 있는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접근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을 중층적 배제 위험에 놓여 있는 이민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 각종 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 의향도 없으며 센터도 이용하지 않는 등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구성,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포함) 자조모임 사업의 핵심 목표, 내용으로 규정
 - 이러한 성격의 자조모임 구성, 운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접근의 효과는 양적인 성과로 환원되기 어려운 만큼, 센터 성과관리나 평가에 있어서도 별도 조치 마련
- ▶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고령층 이주여성 등 배제 위험에 놓일 우려가 큰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센터가 사회 참여 제한 이주여성 자조모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인 이민자 집단과 연계를 갖고 있는 이민자 단체도 사회 참여 통로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개발 고려

③ 이주여성 사회 참여 관련 기존 사업 점검, 개선

● 참가자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이 운영하는 모임, 활동이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에 있어 지니는 효과와 한계 점검, 개선과제 도출

- ▶ 모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와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관련 프로그램, 기관 차원의 현황 점검, 개선방안 도출
- ▶ 프로그램, 기관 차원의 현황 점검, 개선방안 도출 과정에 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 도입

④

이주여성 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

● 활동 참여자들이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인하고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사회 참여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주여성 단체를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

▶ 이주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발

* 해외사례: 이민자 그룹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독립된 지원 항목 운영하는 사례(예: 뉴질랜드 정착지원기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통합과 참여 보조금'), 예산 지원 이외에 전문가, 자원봉사 인력 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안서 쓰는 법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이민자 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꾀하는 사례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기관에서 이주여성 활동가 교육 실시
- 지자체와 관련된 다양한 공간에 이주여성 단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이주여성 단체가 공동으로 단체 운영자, 활동가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체 관련 제도나 지원사업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 기관 지정

⑤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증진 및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강구

●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이주여성들이 집단 간 관계를 동반한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 교육기관이, 교육은 전문 기관과 이주여성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입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속적 접근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초기 적응단계에 개입하는 기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참여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연계, 기관 연계체계 마련
- ▶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선-후배 이주여성이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나눌 수 있는 '이주여성 사회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당사자들이 사회 참여 역량 증진의 필요성,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할 모델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 ▶ 이주여성 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이주여성 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채택

● 사회 참여에 관한 가족의 지지 강화, 가내 역할 재구성을 위한 조치

-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족 교육이나 가족 단위 모임, 활동에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 가내 역할 재구성 방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통합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 다문화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센터 직원, 가족교육 강사, 상담사 등이 그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에 핵심 내용으로 통합

⑥ 공동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집단 간 관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접근

● 집단 간 관계가 동반된 모임, 활동을 운영하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집단 간 구분과 차별, 특정 집단의 주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 필요

- ▶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센터, 새일센터 등 현장 기관의 운영 방향에 ‘집단 간 구분과 차별 방지’를 명시
- ▶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간 관계 체크리스트,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 센터 직원과 프로그램 참가자, 지역사회 활동 참가자 등을 위한 반-차별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참가자들이 수평적인 지위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 과정 개선

- ▶ 통합센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존 공동활동 참가자 집단 간 관계성에 대한 비판적 점검
- ▶ 집단 간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공동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정립, 세부 프로그램 개발

⑦ 집단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단체 간 협력 지원

● 서로 다른 배경의 주민, 서로 다른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여러 단체가 하나의 사업을 기획, 추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와 같이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
 - 사업계획 평가 기준에 해당 요소 반영
 -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참여한 사례를 발굴, 홍보
- ▶ 이주여성 단체와 선주민 단체가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 개발
- ▶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이민자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가점을 주는 등의 적극적 방안 모색

참고자료

UN(2016). Leaving No One Behind: the Imperative of Inclusive Development.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 Executive Summary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관련 부서)